

출장보고서

2023. 6. 16

KDI 경제전망실

1 출장 목적

- OECD EPC(경제정책위원회) 회의 참석
 - OECD EPC(경제정책위원회)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하고 토론
 - 논의된 결과는 OECD Economic Outlook으로 발간될 예정임.

2 출장 개요

- 출장지 및 기간
 - 출장지: 프랑스 파리
 - 출장기간: '23년 5월 15일(월) ~ 5월 19일(금)
- 출장자 (총 1명)

소속	성명	직위
KDI 경제전망실	천소라	부연구위원

3 출장 일정

일자	주요일정(안)
5.15(월)	[이동] 인천(11:30 출발) → 파리(18:30 도착) 이동
5.16(화)~5.17(수)	[OECD EPC 회의 참석]
5.18(목)~ 5.19(금)	[이동] 파리(21:00 출발) → 인천(익일 16:00 도착) 이동

4 활동 내용

1. Global economic outlook and policy requirements (16일 오전)

I. 안건 주요내용

- 2023년 이후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그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음.
-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, 예상보다 이른 중국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활동에 활력을 제공함.
- 세계경제는 2023년 2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긴축 효과, 추가 긴축에 따른 성장 저하 등 하방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함.
- 중국의 경기 반등과 그동안 누적된 가계 저축에 따른 수요 증가는 경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
- 금융시장 전반에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며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이후에 이러한 긴장은 더욱 고조됨.
- 신규 대출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달러의 경우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를 유지하고, 미 국채의 신흥시장 국채 대비

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

- 최근의 경기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초과 저축이 수요 진작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외식 등 식료품 가격의 하락세가 제한되며 가계소득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
-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경우, 세계 경제 성장의 회복 흐름은 더딜 수 있음.
- 또한,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각국 정부는 가격 또는 소득 면에서의 다양한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가격 조치는 에너지 세금 감면, 가격 상한제 등이 있고 소득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이전, 세금 공제 등이 있음.
- 표적화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예산 절감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음.
- 그러나, 취약계층을 따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, 재정적 비용 확대와 동시에 불균형적 지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- 취약계층 타게팅 지원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연동한 최저임금과 복지혜택의 인상 등 소득 지원이 있음.

II. 논의사항

- 회원국들은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

으며 에너지 부분의 물가 상승세가 낮아지고 있음에 대체로 동의

- 산업별 회복 속도의 차이, 부문별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의 차이도 팬데믹 이후 주요국들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지적됨.
-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팬데믹 이후 제조업의 회복속도는 느린 반면 서비스업에서 빠르고 급격한 반등이 관찰됨.
- 이에 따라, 노동시장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물가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음.
- 비에너지 부분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산업별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.
- 회원국들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에는 동의하였으나 국가별 차이로 특정 국가나 섹터에 리스크 가능성을 언급함.
- EU의 경우,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의 차이와 회복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나 통화정책 수단 제한으로 향후 잠재 위험이 상존
- 일본은 중국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하며 이는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
- 재정정책은 에너지 전환,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
- 재정정책은 재정 여력, 정책 시행 시기,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(TUAC, IMF)

- 또한, 회원국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적 조합의 우선순위 설정 외에도 금융 부분의 부실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함 (미국, 영국 등)

2. New perspectives on globalisation(16일 오후 Part1)

1. 안건 주요내용

-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어 무역 및 자본통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산과 무역의 증대, 중간재의 집중화 및 특수화가 이루어짐.
- 세계화는 생산성 향상, 가격하락, 다양한 상품의 출시 및 신흥시장 국가의 소득 증가와 같은 많은 혜택을 가져옴.
- 하지만,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무역의 취약점을 드러냄.
- 복잡해진 글로벌 가치사슬(GVC)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효과를 유발함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여전히 상호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복잡한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음.
- 외부 의존도를 측정하는 것은 노출규모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.

- 외부 의존도 측정 방법은 외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FIR과 구매자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FMR 등이 있음.
- 부문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특정 산업과 제품의 생산은 미국, 중국 등 소수의 국가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.
-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가치의 약 3분의 4를 차지하는 상위 5개 반도체 생산국가가 생산의 약 60%를 차지함.
- 에너지 분야에서도 OECD 국가들은 외국 에너지원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.
- 글로벌 가치사슬 위험을 줄일 방법으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세 가지 전략은 다각화, 재고 조정, 탄력성 향상임.
-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리쇼어링보다 탄력성과 공급의 견고성을 보장하는데 유리
- 재고 조정은 외부충격에 강한 방법으로 알려져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실행 가능성은 산업과 제품, 회사에 따라 다름.
- 따라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외부 충격에 대한 가장 좋은 대항력을 기르는 방법임.
- 아울러,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공적부문의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.
- 공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

않고, 민간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화 될 수 있음.

-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융 인센티브, 규제 요건 및 직접 정부 통제의 조합으로 위험 감소 전략을 지원할 수 있음.

II. 논의사항

- 회원국들은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글로벌 벨류 체인의 문제와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.
- GVC를 통한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이점이 있다는 것은 팬데믹 이후 실증적으로 반대의 증거들이 발견됨.
- 또한, 특정 국가의 특정 자원이 집중되는 경우, 특정 국가 문제의 충격 파급 가능성과 자원 안보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
- 유럽의 경우,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에너지 안보 및 물가 상승률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가 주목받음 (노르웨이)
- 아울러, 제조업 중심 국가들 위주로 경기 부진 심화 등 벨류 체인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이질성이 관측됨.
- 팬데믹 이후 글로벌 벨류 체인으로 인한 글로벌 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지속되고 그 평가 척도도 제한적임.
- 칠레는 GVC 위험 평가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벨류 체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- 프랑스는 거시적으로 보면 GVC로 인한 이익이 증대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
- 리쇼어링, 오프쇼어링 등 기업 정책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 정책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 (스위스)
- 팬데믹 이후 특정 국가의 산업과 수출 문제가 확산되고 자원 수출국과 수입국별 문제가 상이하므로 근본적인 자유무역 이익에 논의할 필요 (콜롬비아)
- 또한, GVC로 특정 섹터의 집중화와 의존성 심화가 경기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벨류 체인 상 연관성이 높은 국가도 취약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

3. Gender and women' s economic empowerment (16일 오후 Part 2)

1. 안건 주요내용

- 성별에 따른 고용, 임금 격차는 지난 10년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정책조치 필요*

*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, 육아휴직 촉진, 직장복귀 촉진 등

- 특히, 여성고용은 많은 국가에서 뒤쳐져 있는 것*이 확인되며 성별 임금격차** 및 유리천장***도 여전히 지속 중

* 특히, 남미·남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

** OECD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'22년 기준 약 12%(한국은 30%이상)

*** OECD 평균 여성의 기업내 임원 중 비율은 '21년 기준 약 28%(한국은 10% 미만)

- 이러한 고용, 임금의 격차는 연금제도에서의 격차까지 이어짐

- 커리어 손실에 따른 평생소득 감소로, OECD 회원국 65세 이상 여성은 동나이대 남성에 비해 약 25% 낮은 연금 수령

- 또한 여성은 경제충격 및 빈곤에 보다 취약한 경향이 있음

- 팬데믹 충격으로 남성대비 취약한(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)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 보다 큰 타격을 입음

- 또한, 미혼모 및 여성고령층은 빈곤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, 최근의 생계비 상승에도 더욱 큰 타격

- 여성 고용 향상 및 기회의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

- 보육, 교육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, 육아휴직을 통해 남-여 모두의 워라벨 향상을 도모할 필요

- 또한, 기업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격차 감소를 지원하고, 세금 및 연금제도도 개편할 필요

II. 논의사항

- 팬데믹 이후,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여성에게는 돌봄과 근로 등의 의무가 중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- 팬데믹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파트타임 위주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(터키)
- 다만, 여성 내에서도 경제활동참여율, 임금 수준, 교육 수준 등이 상이하고,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직무 연계성이 제한적임 (프랑스)
-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간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포용적인 성장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
- 여성의 유리 천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과 육아로 인한 커리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필요(프랑스)
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고령화, 인구구조 변화 등 등의 다양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.

4. Investment, investment financing and productivity growth (17일 오전)

I. 안건 주요내용

- 지난 30년 동안 기업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기업 투자는 감소함.
- 기업의 투자와 유효법인세율(effective corporate tax rate) 간에는 여전히 유의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만, 유효법인세에 대한 투자 민감도(sensitivity)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함.
- 또한, 법인세와 기업 투자 사이의 관계는 법인세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, 법인세 인하의 투자 증진 효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에 비해 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non-profit tax의 부과는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, 기업 투자 및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법인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-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capital allowance 등 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투자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.

II. 논의사항

- 회원국들은 팬데믹 이후 다양한 경제 충격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변화하고 그 효과도 위기 이전과 달라지고 있음에 대체로 동의
- 팬데믹 이후로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투자 재원 확보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어려움이 누적됨.
- 전세계적인 거시적 충격과 각국의 산업별 충격으로 인한 문제가 중첩되며 투자 부진 문제를 이해하기 더욱 복잡해짐 (코스타리카)
- 이에 따라 저탄소 전환 및 디지털 전환으로의 중장기적 투자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구조개혁에도 어려움이 직면함 (그리스)
-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제한적임.
 - 미국의 경우 국가 부채의 심각성이 여러차례 대두되고 있으며 주변국들도 과도한 국가 부채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.
 -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재정 정책이 민간 부분의 투자를 구축 시키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위해 재정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
 - 일부 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기업활동에 구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함.

5.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(17일 오전)

1. 안건 주요내용

- 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됨.
-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줄이면서 기업이 가진 생산 능력이 모두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.
-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3년 후부터 반전되어 4년 후에는 가격 충격 전보다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장기적인 생산성 개선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기업이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때문임.
- 위의 분석 결과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이 서로 달라야 함을 시사
- 따라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나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

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줄일 필요

II. 논의사항

- 회원국들은 대체로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위협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글로벌한 문제임에 동의함
 - 이는 특정 국가의 참여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며, 회원국 외에도 자발적인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절실한 문제임.
 - 또한,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에너지 문제와 노동장의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문제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
- 회원국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장기화되는 경우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공감
 - 구조 전환이 단기적 가격 충격으로 투자가 제한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정책이 투자 여건이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강조됨.
 - 또한, 저탄소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탄소 발자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공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 (TUAC)